

NEWS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광주 '현금 없는 시내버스' 내달부터 도입

공무원시험 1차 관문 PSAT 2027년부터 별도로 시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의 공공역량검증시험으로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증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PSAT는 5급·7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으로 포함돼 있었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PSAT는 난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시험으로 나뉜다.

기본 시험은 언어능력,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등 3개 평가영역으로 나뉘며, 심화 시험은 3개 영역에 현범이 추가된다.

기본 시험은 매년 7월 연 1회 시행하며, 인사처 7급 공채시험·지자체 7급 공채시험·인사처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PSAT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취득한 PSAT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인사처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면 '윤 심판의 날'서 계속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선고판 남겨 놓았다. 현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 뿐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일부 탄핵 사유가 겹치는 만큼 함께 하거나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일각에선 현재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속의를 이어갈 경우 이달 말에서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 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압박하면서 테러 및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됐다.

현금함, 도심 노선 우선 철거...6월부터 재래시장·외곽 디지털 취약계층, 계좌이체·선불카드 등 대체수단 마련

광주시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도입한다.

광주시는 먼저 4월부터 5월까지 도심 중심 운행 노선의 현금함을 철거하고, 6월과 7월에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타운, 재래시장, 도심외곽 경우 노선의 현금함을 철거할 계획이다.

노선별로 현금함 철거 전까지는 지금까지처럼 현금결제 가능하고, 철거 후에는 교통카드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어르신, 금융저신용자,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해 시민 누구나 다양한 현금 대체방법으로 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대체방법으로는 시내버스 내 비치된 안내문에 의해 계좌이체, 버스 내 판매 선불교통카드 구입, 정류소 및 버스 내 안내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등을 운영한다.

단, 버스 내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운전원의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

일정기간 운영 후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도입되면 현금 정산 절차가 없어져 운전원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안전운행 여건이 조성되고, 배차 정시성이 높아지며,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도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의 근거가 됐다. 실제 광주G-패스가 도입된 올해 1월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은 1.6%에 그쳤다는 지난해 평균 1.9%보다 0.3%p(15.8%) 줄어든 것이다.

점진 도입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금 없는 시내버

스' 시범운행을 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전면 도입에 앞서 시민과 시의회, 전문가, 현장 운수종사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서였다.

시범운영 결과, 4월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광주ON 설문조사에서 5000여명의 참여자 가운데 제도 도입에는 61%가, 4월 시행에는 56%가 찬성했다. 현금대체수단 선호도는 계좌이체, 교통카드 판매, QR코드에 의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순으로 응답했다.

다만,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 마련

과 홍보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같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도입 시기를 4월로 하되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노선은 현금함을 후순위에 철거하되 다양한 현금대체방법 운영, 어르신 대상 현장 홍보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버스조합, 노조, 10개 버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미리 교통카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타운, 경로당,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광주G-패스 발급 안내 등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디지털 문해 교육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GCC사관학교, 콘텐츠 인재 140명 힘찬 출발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광주실감콘텐츠코브(GCC) VX스튜디오에서 열린 'GCC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 인교식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오늘부터 전국서 발급

14일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대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 모두 기각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최 원장과 감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현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경호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 제공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이 임의적 절차임을 들어 이 지검장이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판관 낭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양 공업용수도 공급사업 예타 통과

2028년 착공...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 안정적 공급

전남도는 13일 '광양(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양(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은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에 안정적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루 10만6000t의 공업용수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2128억 원,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다.

전남도는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함께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 2022년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같은 해 10월 국가수도계획에 반영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의 추가 입주기업과 투자 확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대규모 기업투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은 환경부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8년 착공해 203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동부지역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양(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적기에 사업을 완료해 용수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